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는 지역별 고용 및 고용서비스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함으로써 시도별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고용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발간자료입니다.

● ● ● 이용자 안내 ● ● ●

1. 본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의 심층분석 원고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시도별 통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DB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의 경우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 통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사업장 통계는 1인 이상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입니다.
5. 지역 구분에서 세종시는 제외하였으며, 구인인원은 근무시도 기준, 구직건수는 거주시도 기준 자료입니다.
6. 통계표의 숫자는 지역무관 및 분류불능이나 오류인 경우를 제외하고 표기하므로, 전체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 이 상 호¹⁾

들어가며

●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이 말하는 암울한 미래

- ◆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
 - 일본은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주목
 -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 분수효과 → 지방의 동반성장 →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으나,
 -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이 어려움
 - 매년 6~8만 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 경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시구정촌이 무려 896개(전체의 49.8%)에 이를 것으로 추정
- ◆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임

● ‘지방소멸’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일까?

- ◆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3.1%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지방소멸’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없는 미래로 비춰질 수도 있음

1)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cclg007@keis.or.kr)

- 그러나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이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함

◆ 이 글은 마스다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지표들을 차용·변용하여 7가지 분석을 시도

- 과연 지방소멸은 한국에서 시기상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

- 가임여성의 90% 이상이 이 연령대에 속하는 젊은 여성인구이므로 한 사회가 20~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임

1.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역전됨

◆ 지난 1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은 거의 1:1로 감소

- 2004년 우리나라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6.9%로 65세 이상 고령인구(8.3%)보다 2배 정도 많았음
-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여성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3.4%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13.1%를 차지함

◆ 이 같은 비율 변화는 일본의 16년, 미국의 21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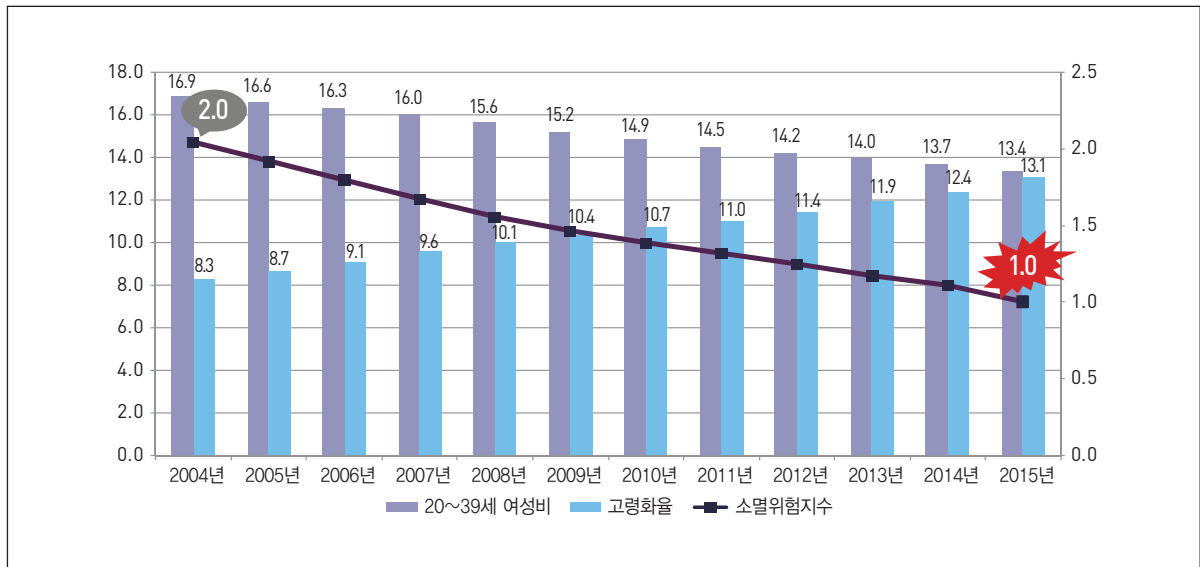
- 일본은 1976년에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2.0이었는데, 1992년 1.0으로 떨어질 때까지 16년이 소요됨
- 미국은 1970~1988년까지 1.4를 유지하다가 2009년 1.0으로 불과 0.4가 하락하는데 무려 21년이 소요됨

◆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은 커질 것임

-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차환 출산율, 즉 2.0 정도)이 유지되고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 고령인구 비중과 20~39세 여성인구 비중 간의 상대비가 1.0이라는 것은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 20~39세 여성인구비중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추이(2004~2015년)

(단위: % 상대비)



주 : 2014년 이전은 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이며, 2015년은 행자부 2015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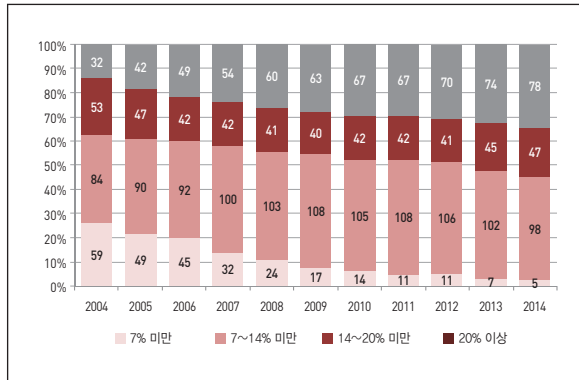
2.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들은 이미 79개에 달함

- ◆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04년 6개 → '14년 77개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3.1%로 아직 '고령화 사회' 수준이지만, 기초 지자체별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이 2014년 기준 228개 중 78개(34.2%)임
 - ※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함
- ◆ 여성인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고령인구가 20%를 넘는다면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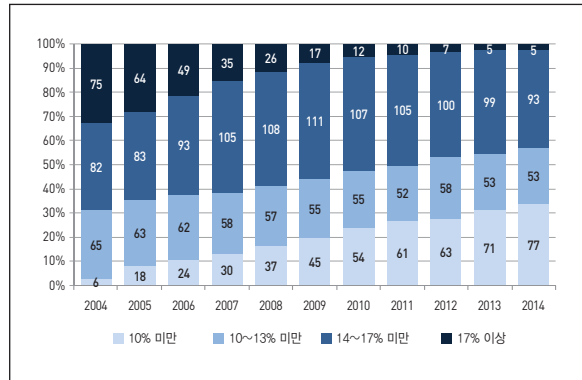
[그림 2] 기초 지자체별 고령인구 및 20~39세 여성인구 구성 변화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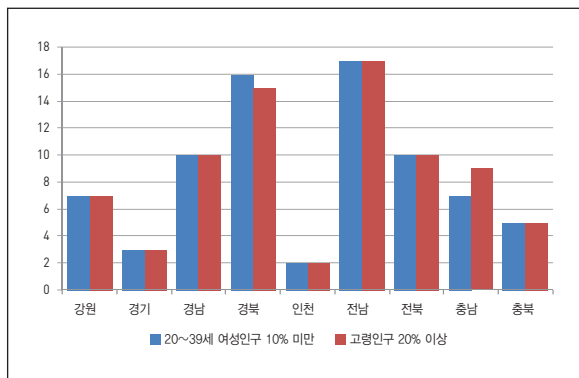
(a) 65세 이상 인구



(b) 20~39세 여성인구



(c) 지역별 분포



(d)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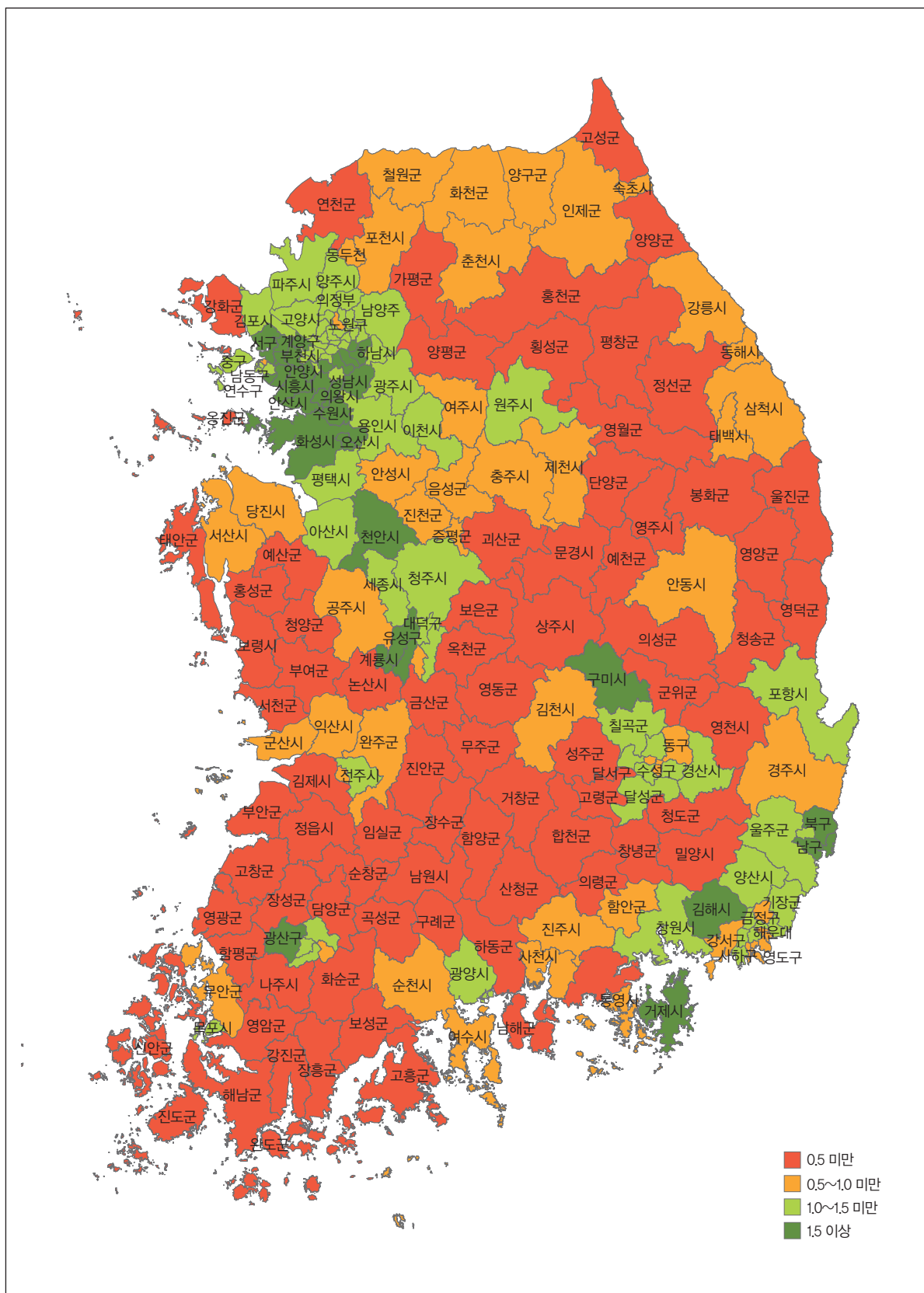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합계
		7% 미만	14% 미만	20% 미만	20% 이상	
20~39세 여성 인구 비중	10% 미만			1	76	77
	13% 미만		14	37	2	53
	17% 미만	5	79	9		93
	17% 이상		5			5
합계		5	98	47	78	228

◆ 이런 현상을 수치지도로 확인해보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도에서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0.5 미만(붉은 색으로 표시)인 지역들은 79개나 되며 대부분 비수도권임

– 특히 전남의 경우 이런 소멸위험지역이 3/4 이상(17/22개)인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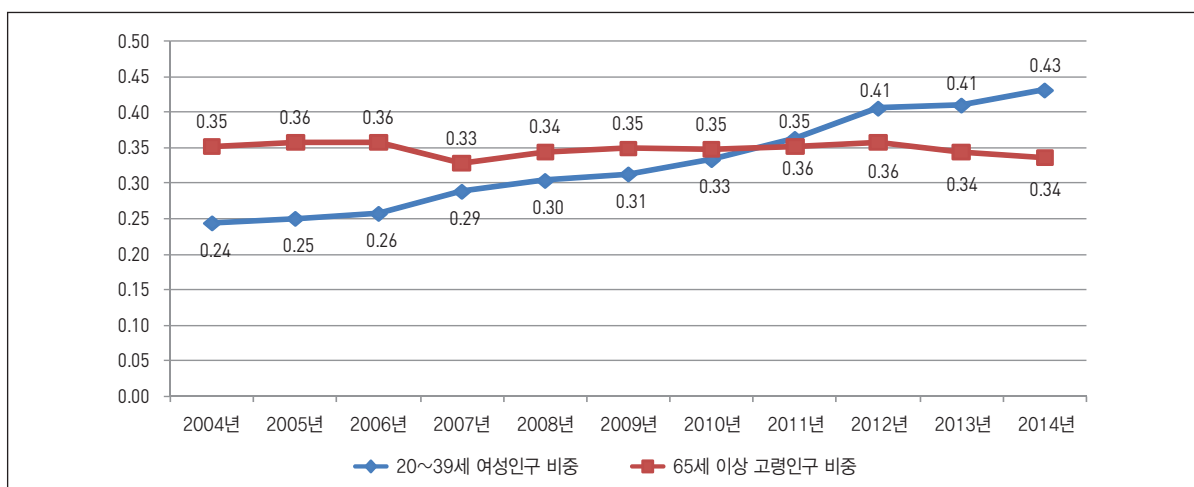
[지도 1]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



3.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의 지역 간 격차는 증가

- ◆ 228개 기초 지자체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표준화하여 각 연도별로 ‘지니계수’ 값을 계산함
 - ‘지니계수’ 값은 공간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일 극단적으로 모든 기초 지자체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동일하다면 0값을 가짐
 - 반대로 각 지자체 간 해당 값의 분포가 매우 불균등한 분포를 갖는다면 0.5에 가까운 값을 가짐
- ◆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의 지니계수 값은 2004년 0.24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0.43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반대로 고령인구 비중의 지니계수 값은 지난 10년간 0.34~0.35로 거의 변동이 없었음
 - 그림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엡킨슨 지수, 엔트로피 지수, p90/p10 비율 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
- ◆ 예컨대 고령인구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젊은 여성인구의 분포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어 온 것임
 - 고령화는 기존의 인구구성을 유지하면서 주로 자연적 변화에 따라 진행되지만, 젊은 여성인구는 지역 간 이동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 공간 지니계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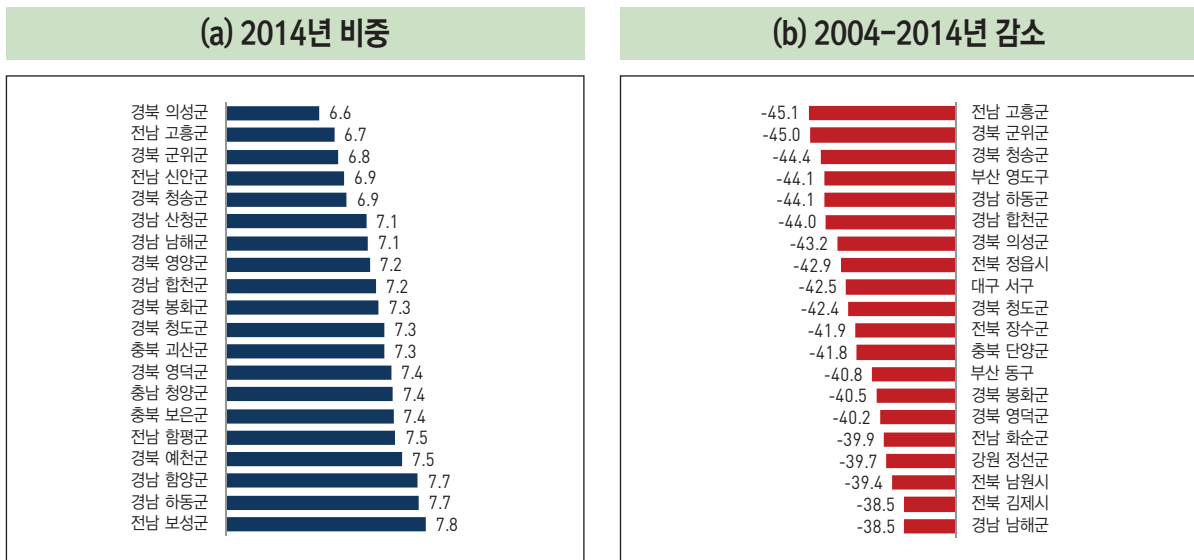
주 : 절대적 비교를 위해 두 지수 모두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음

4.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들은 어디일까?

- ◆ 젊은 여성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이 6.6~7.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함
 - 두 지표 간의 상대비는 0.19~0.25(즉 여성인구가 20~25%)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
 - 마스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30년 이내 소멸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임
 - 소멸위험 지역의 다수는 지난 10년 간 젊은 여성인구 수가 약 40~45% 가량 감소했으며, 지역의 쇠퇴는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 젊은 여성의 비중이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중 일부는 대도시의 전통 제조업 집적지들이 포함되어 있음
 - 부산 영도구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0년 간 44.4%나 감소함. 즉 산업단지의 낙후성과 쇠퇴는 젊은 여성들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4] 20~39세 여성인구 비중 및 감소 하위 20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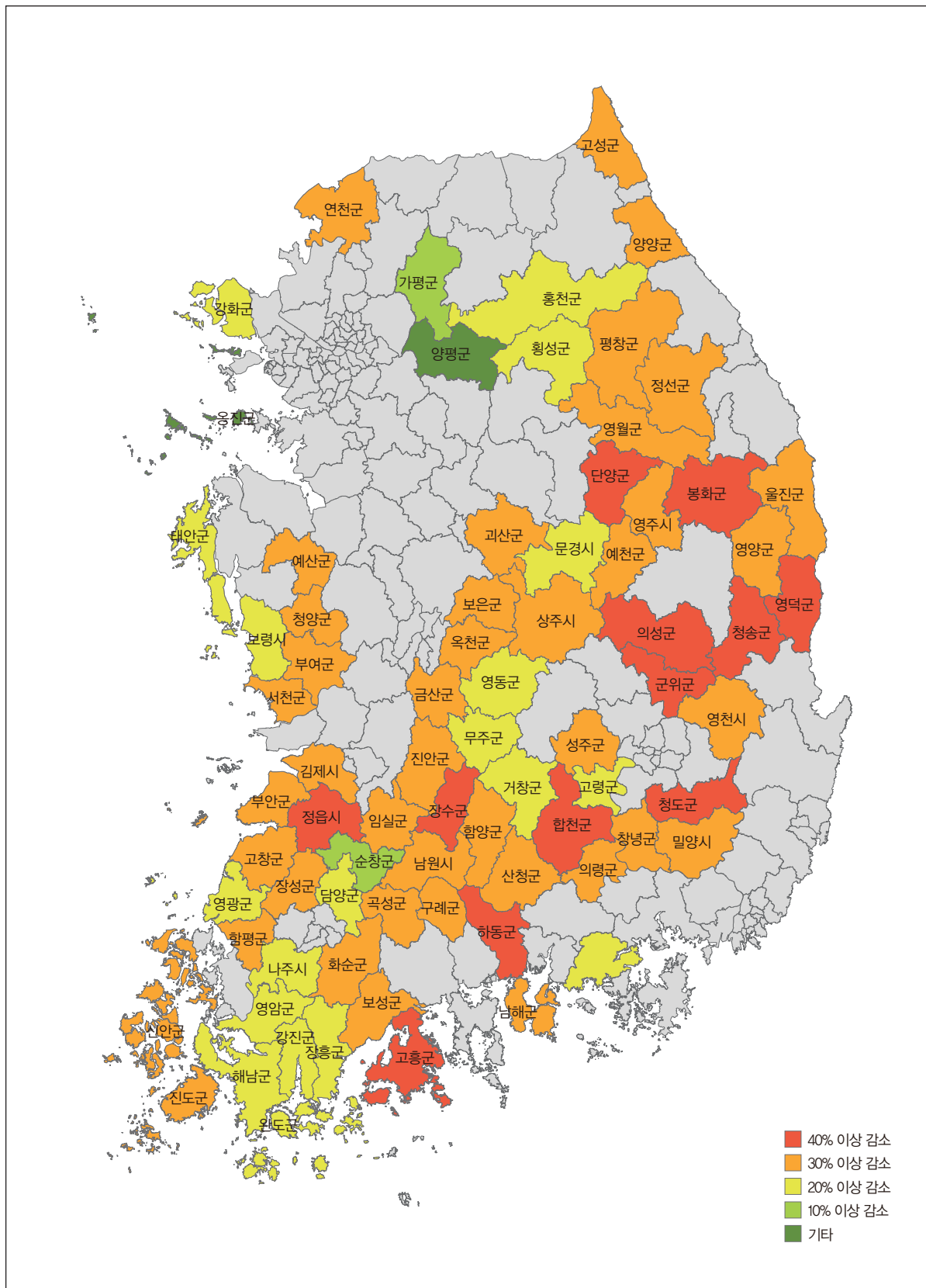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 통계청, KOSIS.

- ◆ [지도 2]를 통해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 미만(77개)인 지역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대도시 세력이 약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지역의 젊은 여성인구 감소율은 지역별로 진행속도가 상이하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멸위험 지역들의 포위망은 점점 확장될 것임

[지도 2] 20~39세 여성인구 비중 10% 미만 지자체의 해당 여성인구 감소율('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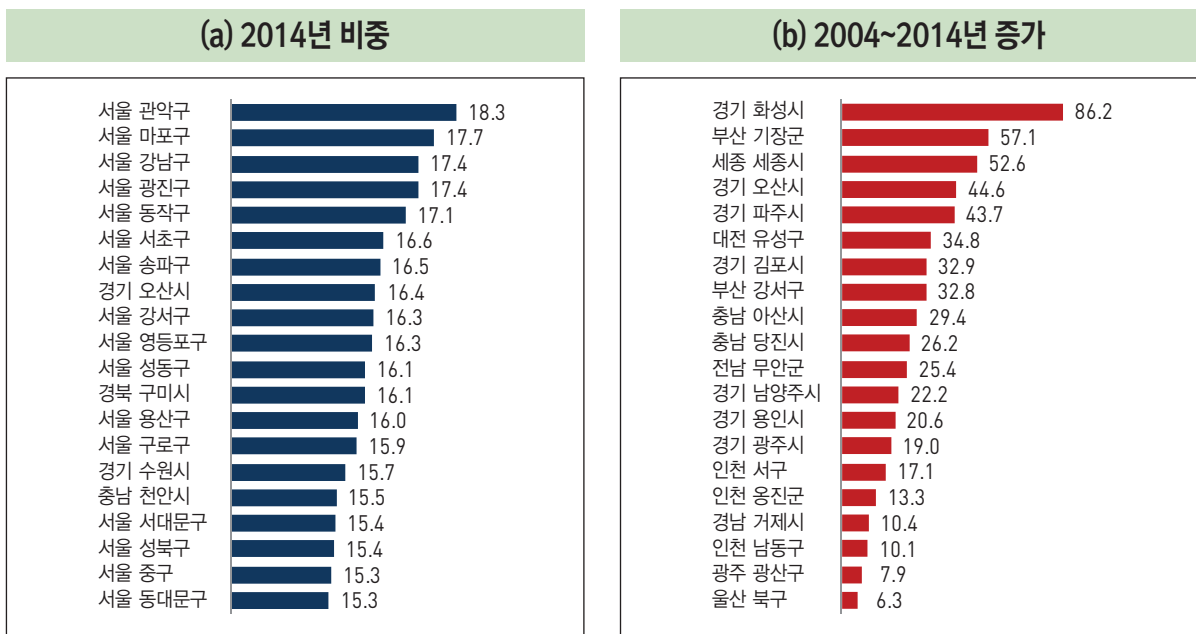


5.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지역들은 어떤 곳일까?

- ◆ 젊은 여성비중이 빠져나간 지역과 빠져나가는 지역은 다수가 일치하지만, 젊은 여성이 ‘모여드는 지역’과 이미 ‘모여 있는 지역’은 서로 다름
 - 젊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역시 서울로, 상위 20개 중 18개가 서울시 기초구이며, 나머지 2개도 경기도 지역임
 -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기존 대도시권의 베드타운이나 교육 중심지,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지 등이 차지함
- ◆ 젊은 여성이 모여들고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력권의 신도시들임
 - 경기도 화성시는 10년 간 젊은 여성인구 수가 86.2%나 증가했으며 2014년에도 2천 명 가까이 순유입
 -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에서 젊은 여성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세종시는 2014년 20~39세 여성인구만 14천 명이 순유입되었으며,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 역시 여성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은 높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종시와 무안군 같은 지방의 신흥 성장지역들은 출산율 역시 높음

[그림 5] 20~39세 여성인구 비중 및 증가상위 20개 지역

(단위: 개)



자료: 통계청, KOSIS.

6. 젊은 여성이 집중된 서울권의 출산율이 가장 낮음

◆ 수도권으로 젊은 여성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왜 문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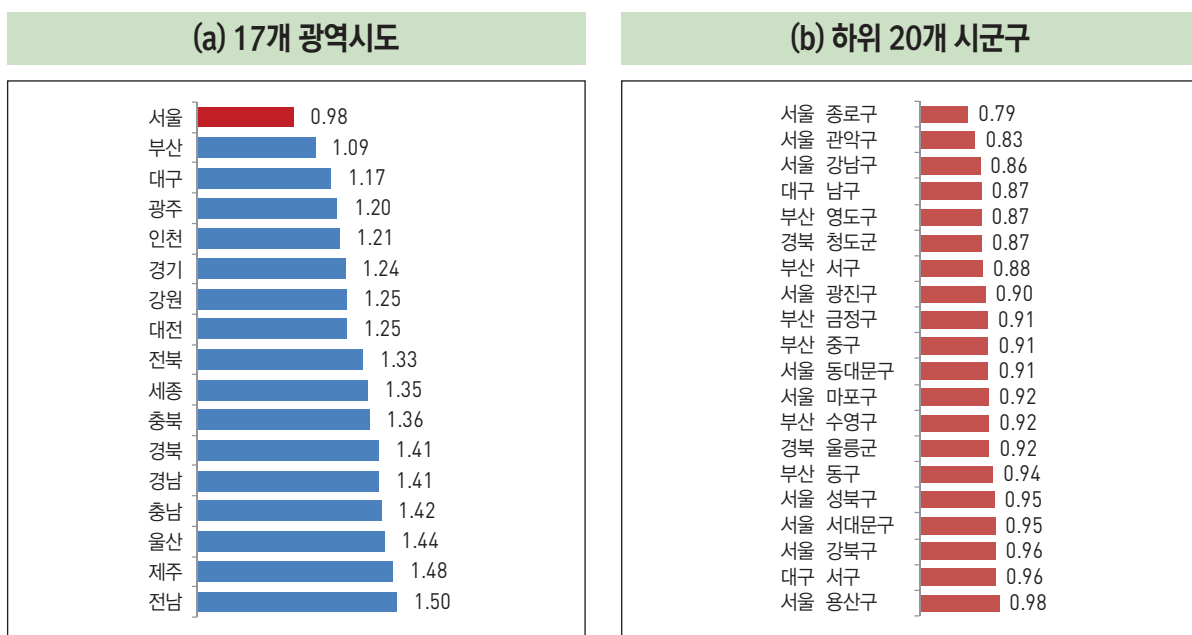
-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불균등한 지역발전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대해 '지방소멸'의 저자 마스다는 현재와 같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방이 소멸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대도시가 된다고 주장함
-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더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권마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임

◆ 마스다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도쿄권의 출산율은 1.13(2013년)이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이보다도 더 낮은 0.98(2014년)에 그쳤음

-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와 지방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들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 한국에서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층들이 '블랙홀'과 같이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에서의 경쟁 탓으로 더욱 더 자녀를 낳기 어려움

[그림 6] 2014년 합계출산율 분포

(단위: 개)



자료: 통계청, KOSIS.

7. 젊은 여성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률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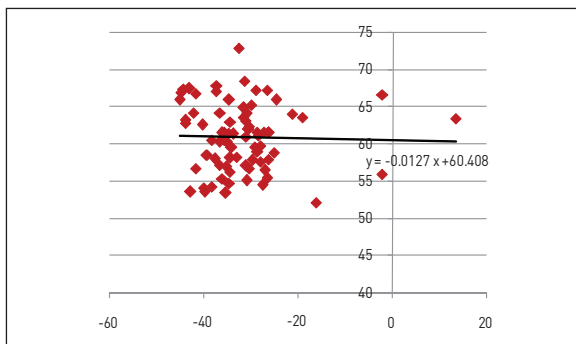
◆ 228개 기초 지자체들의 '14/'04년 20~39세 여성인구 증감률과 2010년 로그고용률²⁾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

- 그림의 (a)와 같이 20~39세 여성인구비중이 10% 미만인 지역에서는 여성인구의 유출과 고용률 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여성인구비중이 10~14% 미만인 지역에서는 여성인구 감소율이 높을수록 고용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회귀계수 0.193)
- 여성인구가 14% 이상인 경우 여성인구 증가가 고용률을 높이지만 그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회귀계수 0.063)
- 소멸위험 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들 때문이며, 이런 지역을 제외할 경우 여성인구 유입(출)은 고용률을 증가(감소)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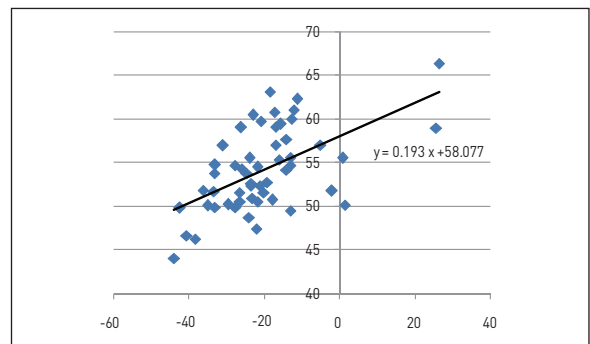
[그림 7] 20~39세 여성인구 증감률과 고용률과의 상관관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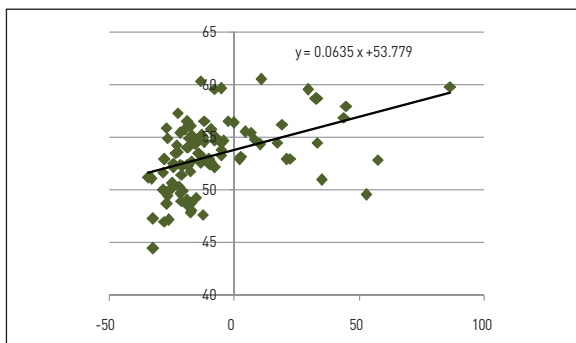
(a) 여성인구비중 10% 미만



(b) 여성인구비중 10~14% 미만



(c) 여성인구비중 14% 이상



(d) 회귀식: 고용률(로그)

	계수	표준 오차	t-값
20~39세 여성인구변화율('14 / '04년)	0.098	(0.029)	3.35
20~39세 여성인구비중('14년)	0.016	(0.005)	2.88
로그인구규모('14년)	-0.014	(0.008)	-1.83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14년)	0.009	(0.002)	6.00
노동공급자급률('10년)	0.170	(0.038)	4.51
제조업종사자비중('12년)	0.096	(0.032)	2.98
조정된R2 / 사례수	0.534 / 228개		

2) 기초 지자체의 고용률은 2010년 인구총조사로부터 산출함.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는 특광역시 구/군부에 대한 고용률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임

나가는 글 : 지방이 생존하는 길은 무엇일까?

-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지방소멸로 한국이 가는 길은 결코 일본과 다르지 않음
- ◆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지역-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국가 수준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됨(지난 10년 간 합계출산율은 '05년 1.08 → '14년 1.20로 0.12만 증가)
 - 하지만 젊은 여성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책개입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 그런데 '젊은 층'이 아니라 왜 굳이 '젊은 여성'일까?
 - 정책대상을 젊은 여성으로 타깃팅 할 경우 범위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 달라지기 때문임
 -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지자체들이 수많은 청년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모호할 뿐더러 그 효과도 불확실함
 - 그러나 젊은 여성의 유출을 방지하고 다시 유입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보다 명료함. 예컨대 인프라 측면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임
- ◆ 그러나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이 기준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도시재생/산업재생을 할 때의 방향성, 지역 전략 산업 선정, 보조금과 일자리 사업의 편성 등에 적용될 수 있음
 - 지자체장이 단순히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선언하고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매년 1% 늘리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음
 - 중앙 정부 역시 지역 정책을 집행할 때, 가령 소멸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을 유형화하여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더 나음
 - 물론 모든 지역이 독립적으로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는 힘들며, 작은 규모 지역들은 지방의 중핵도시와 이런 자원들을 특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부록] 소멸위험 지자체의 주요 인가지표

	시도	시군구	'14년 소멸위험도			'14년 인구 순유출입		'14/'04년 인구증감률		'14년 합계 출산율	'14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20~39세 여성인구비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	상대비	전체	여성	20~39세 여성	전체		
1	경북	의성군	6.6	34.9	0.19	-232	-201	-43.2	-18.2	1.45	55,029
2	전남	고흥군	6.7	35.3	0.19	-220	-252	-45.1	-21.8	1.10	69,683
3	경북	군위군	6.8	34.4	0.20	189	-34	-45.0	-18.1	1.38	23,991
4	경남	남해군	7.1	33.0	0.22	-140	-190	-38.5	-13.2	1.19	46,651
5	경남	합천군	7.2	33.1	0.22	651	-59	-44.0	-15.5	1.12	49,887
6	경북	청송군	6.9	31.2	0.22	178	-64	-44.4	-14.5	1.60	26,265
7	전남	신안군	6.9	31.0	0.22	-141	-125	-32.7	-11.6	1.65	43,458
8	경북	영양군	7.2	31.7	0.23	43	-55	-37.4	-11.9	1.63	18,055
9	경남	산청군	7.1	31.2	0.23	153	-82	-35.4	-4.7	1.76	35,572
10	경북	영덕군	7.4	31.5	0.23	-270	-146	-40.2	-14.9	1.45	39,504
11	경북	예천군	7.5	32.1	0.23	-149	-179	-36.7	-15.0	1.30	44,978
12	전남	함평군	7.5	31.7	0.24	-351	-126	-36.4	-15.0	1.95	34,972
13	경북	봉화군	7.3	30.4	0.24	314	-84	-40.5	-12.7	1.65	33,596
14	경북	청도군	7.3	30.6	0.24	617	-46	-42.4	-10.9	0.87	43,593
15	전남	보성군	7.8	32.5	0.24	-268	-153	-35.7	-17.2	1.74	45,663
16	충남	청양군	7.4	30.6	0.24	324	-101	-34.7	-11.9	1.50	31,990
17	경남	의령군	7.8	32.0	0.24	4	-86	-34.6	-10.5	1.60	29,140
18	전북	임실군	7.9	31.1	0.25	405	-51	-31.7	-11.8	1.81	29,668
19	충북	괴산군	7.3	28.8	0.25	577	-104	-30.5	-5.4	1.12	37,837
20	전남	곡성군	8.0	31.5	0.25	-54	-182	-33.2	-12.0	1.35	30,663
21	충북	보은군	7.4	29.0	0.26	152	-89	-35.8	-11.9	1.47	33,942
22	전남	진도군	7.9	30.3	0.26	-39	-53	-31.6	-13.9	1.66	32,580
23	경남	함양군	7.7	29.3	0.26	147	-92	-30.9	-4.8	1.43	40,312
24	충남	서천군	7.9	29.4	0.27	-299	-194	-35.2	-13.5	1.29	57,546
25	전남	구례군	7.9	29.4	0.27	270	-24	-35.7	-11.3	1.45	26,954
26	경남	하동군	7.7	28.4	0.27	-581	-276	-44.1	-12.5	1.22	49,398
27	전북	진안군	8.1	29.9	0.27	-111	-91	-37.4	-13.8	1.65	26,401
28	전북	장수군	8.1	28.7	0.28	240	-12	-41.9	-17.6	1.46	23,181
29	전북	고창군	8.1	28.5	0.28	-118	-181	-31.1	-11.2	1.45	59,856
30	전남	장흥군	8.3	28.9	0.29	447	-15	-26.3	-9.3	1.28	42,797
31	전남	완도군	8.1	28.4	0.29	-258	-155	-29.3	-12.4	1.90	53,054
32	전북	순창군	8.6	30.0	0.29	327	-41	-19.2	-4.7	1.14	30,149
33	인천	강화군	8.0	27.5	0.29	748	-10	-26.4	2.2	1.10	66,488
34	충남	부여군	8.0	27.5	0.29	-320	-200	-36.8	-15.2	1.19	71,441
35	전북	무주군	8.3	28.4	0.29	107	-66	-24.7	-4.4	1.66	25,285
36	전북	부안군	8.4	27.2	0.31	-1313	-362	-35.3	-14.2	1.35	57,867
37	전남	강진군	9.0	28.9	0.31	-91	-56	-21.4	-10.2	1.92	39,659
38	경북	상주시	8.4	26.0	0.32	129	-205	-33.9	-10.2	1.31	102,337
39	충북	단양군	8.0	24.5	0.33	-41	-83	-41.8	-12.8	1.07	30,709

			'14년 소멸위험도			'14년 인구 순유출입		'14/'04년 인구증감률		'14년 합계 출산율	'14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시도	시군구	20~39 세여성인구비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	상대비	전체	여성	20~39세 여성	전체		
40	전남	해남군	8.9	27.2	0.33	-625	-93	-30.0	-13.7	2.43	76,694
41	경남	창녕군	8.4	25.8	0.33	378	-92	-30.7	-5.6	1.40	62,977
42	경북	성주군	8.4	25.7	0.33	114	-32	-31.6	-7.3	1.47	44,652
43	충북	영동군	8.8	26.0	0.34	583	-43	-28.6	-5.7	1.22	50,288
44	전남	담양군	9.2	27.1	0.34	-83	-142	-27.1	-7.6	1.69	46,898
45	전북	김제시	9.0	26.3	0.34	-643	-343	-38.5	-16.8	1.31	89,795
46	충남	태안군	8.5	24.9	0.34	430	-118	-29.0	-2.8	1.27	62,061
47	충남	금산군	8.6	25.1	0.34	-69	-147	-34.5	-9.2	1.41	54,835
48	전남	장성군	9.1	26.3	0.35	41	-38	-31.0	-9.8	1.83	45,865
49	강원	영월군	8.4	23.6	0.35	272	-171	-36.2	-8.4	1.08	39,593
50	경남	고성군	8.8	24.9	0.35	-211	-229	-28.1	-4.0	1.39	55,720
51	강원	양양군	8.7	24.2	0.36	-25	-96	-34.9	-6.5	1.08	27,425
52	강원	횡성군	8.6	23.8	0.36	685	-25	-29.7	1.2	1.08	44,839
53	전남	영광군	9.2	25.1	0.37	-650	-126	-28.2	-10.8	1.67	56,682
54	충남	예산군	9.0	24.4	0.37	70	-207	-31.3	-9.6	1.18	84,451
55	경북	고령군	8.9	24.1	0.37	-71	-81	-25.2	0.5	1.62	34,901
56	경북	울진군	9.0	24.1	0.37	310	-17	-36.8	-13.5	1.66	51,718
57	경북	문경시	9.2	24.1	0.38	467	-98	-26.7	-6.4	1.55	75,243
58	충북	옥천군	9.0	23.6	0.38	-74	-140	-34.3	-8.6	1.32	52,153
59	경남	거창군	9.2	23.9	0.39	207	-115	-28.8	-4.8	1.33	62,795
60	강원	고성군	8.9	22.6	0.39	-8	-132	-31.1	-7.5	1.34	30,122
61	전남	나주시	9.8	24.8	0.40	3150	551	-27.7	-12.0	1.49	88,438
62	경북	영천시	9.4	23.3	0.40	126	-199	-37.7	-10.0	1.50	99,873
63	전북	남원시	9.6	23.1	0.41	-540	-296	-39.4	-13.7	1.47	85,551
64	강원	평창군	9.1	21.6	0.42	174	-79	-34.5	-5.6	1.05	43,272
65	경남	밀양시	9.4	22.1	0.42	19	-298	-34.7	-8.2	1.12	107,071
66	인천	옹진군	8.7	20.5	0.43	47	67	13.3	41.1	1.39	20,526
67	전북	정읍시	9.7	22.9	0.43	-750	-490	-42.9	-18.9	1.30	116,621
68	전남	영암군	9.9	22.4	0.44	-291	-91	-26.7	-7.0	2.00	58,417
69	강원	정선군	9.5	21.4	0.44	-459	-188	-39.7	-15.2	1.31	38,837
70	전남	화순군	10.0	22.4	0.45	-889	-240	-39.9	-11.6	1.27	66,823
71	경북	영주시	9.5	20.7	0.46	-1536	-588	-35.5	-9.5	1.30	110,959
72	경기	연천군	9.9	21.4	0.46	-287	-93	-30.5	-8.5	1.85	44,944
73	경기	가평군	9.7	20.7	0.47	314	-149	-16.3	9.9	1.25	60,384
74	충남	보령시	9.7	20.5	0.47	-372	-230	-28.7	-5.3	1.38	90,080
75	강원	홍천군	9.6	20.2	0.48	3	-119	-27.4	-2.3	1.29	103,815
76	경기	양평군	9.9	20.1	0.49	1955	65	-2.3	23.1	1.29	70,010
77	경북	울릉군	9.8	19.6	0.50	-231	-37	-2.2	10.2	0.92	124,063